

李대통령 “원자력발전소 계속 건설”

• 현직 대통령 KINS 첫 방문.... 국내 원자력시설 안전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난달 17일 대전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방문해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방재상황실을 들러 윤철호 원장으로부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확산에 따른 대응 현황 및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운영, 안전점검 등에 있어 후발국이지만 최고의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게 좋겠으며, 우수 인력이 보강돼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기술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료 평균 7.6% 인상案

• 주택용보다 산업용 더 올리기로

오는 7월 전기요금을 올릴 예정인 정부가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보다 더 올리는 차등(差等) 인상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작년 8월에도 전기 요금을 평균 3.5% 인상하면서 산업용은 5.8%, 주택용은 2% 올리는 차등 인상을 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2%라고 밝힌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평균 7.6%의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구체적인 인상 폭을 협의해 7월에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력의 평균 원가(原價)는 kWh당 85.73원인데 요금은 평균 76.63원이어서 생산 원가의 89.4%를 요금으로 내는 셈이다. 반면 주택용 전력의 평균 원가는 kWh당 127.17원인데 요금은 평균 119.85원이어서 원가의 94.2%를 요금으로 부담한다. 이런 가격 구조 아래서 혜택을 보는 것은 전자·철강·정유 등 제조업 대기업인데, 최근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대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일본(89), 영국(63), 프랑스(85), 독일(76), OECD 평균은 91이어서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다. 반면 주거부문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일본(195), 영국(166), 프랑스(210), 독일(147),

OECD 평균은 209이어서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다. 결국 가계가 아니라 산업부문의 전력 과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한국 전기차 시대 ‘가속페달’ 밟는다

• 상용화 예상보다 빨라질 듯

전기자동차가 국내에서 예상보다 빨리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준중형차 기준으로 가솔린 모델을 연간 1만5000Km 주행했을 때 연간 기름값(ℓ 당 1600원 기준)은 218만3000원이며, 동급 전기차를 같은 거리 주행했을 때 전기료는 17만4000원으로 10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가격이 기존 가솔린차의 120~130% 수준만 돼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20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상용화에 강점이 있고,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도 향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3년 전기차 상용화를 목표로 아파트와 상가, 주유소 등에 대대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갖출 경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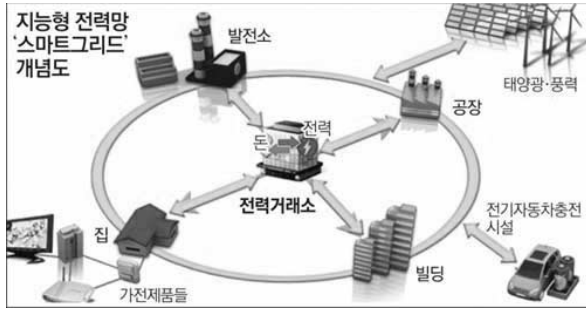
쓰고 남은 서울전기, 대전에 되판다

•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2030년 상용화 추진

‘서울 우리 집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대전의 아파트에 판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스무 살이 되는 2030년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현재 정부 주도로 각 업체가 지능형 전력망인 이른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으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만들어낸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다른 공장이나 아파트, 빌딩 등에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의 생산과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순간적으로 높게 부과할 수 있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구입해 집에 마련된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해 났다가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면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가전제품과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만 작동하는 세탁기, 미리 설정해 놓은 전기요금 한도 내에서만 작동하는 냉·난방 및 조명장치 등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7월 172곳서 시범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종합대응 체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발전회사와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참석해 지식경제부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국내 준비여건이 미흡하고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본격 시행에 앞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7월 중 거래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172개 사업장은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며, 내년에는 대상이 산업·발전 부문 378개 업체 80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 사업에서 페널티는 가하지 않되 우수 사업장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는 주기로 했다. KEA